

가게 앞 불법적치물 기승... “영업 차질·보행 불편”

흰색 실선에도 타이어 등 설치
주정차 방해·승하차 지장 초래
市 불법적치물 단속 2만5000건
“주민·자영업자 등 갈등 심화”

광주 도심 주택가와 상가가 밀집한 골목 곳곳에 불법 적치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불법 적치물은 주정차를 방해하고 시민들의 통행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오전 찾은 광주 남구 봉선동 주택가 도로 갓길은 흰색 실선으로 주차를 할 수 있지만 주택 입주민과 가게 업주들이 세워둔 라바콘, 주차금지 안내판, 타이어 등이 나란히 줄을 잇고 있었다. 이들은 건물 입구가 막히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적치물을 세워둔 것이다.

보행자들은 이 적치물로 인해 좁은 도로 안쪽으로 걸을 수밖에 없어 이동하는 차량과 부딪히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했다. 또 이곳을 방문한 운전자들은 마땅한

주차장소를 찾지 못해 골목 주변을 하염 없이 돌기도 했다.

김승제(35)씨는 “주차가 가능한 흰색 실선에 간판을 치우고 주차를 해버릴까 생각하지만,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손대지 않는다”며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라면 좀 차를 댈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찾은 북구 용봉동 상권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흰색 실선 구역에 타이어와 쓰레기 등 적치물들이 주차를 못하게 막아 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차를 가져온 한 시민은 식당을 방문하려다 입구에 놓여있는 적치물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자 직원에게 “적치물을 치우고 주차를 해도 되냐”고 묻기도 했다. 이 곳을 방문한 택시기사도 적치물들 때문에 택시 운행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택시기사 조모(60)씨는 “직업 특성 상, 낮은 시간까지 도로 깊은 곳 상가 주변까지 차가 들어가야 할 때가 많다. 하지만 흰색 실선임에도 도로 위 커다란 간판이나 타이어 등이 놓여 있어 손님을 태우고



14일 광주 북구 용봉동 상가 골목길에 흰색 실선임에도 불법 적치물인 타이어를 설치해 주정차를 막아둔 모습.

내리기도 힘들 때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가게 업주들은 일부 운전자들의 무차별한 주차 때문에 적치물을 둘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신모(70)씨는 “잠깐 일을 보러 밖에 나가거나 방에서 쉬면, 그 사이 가게 앞에 주차해 문을 막으니 어

쩔 수 없이 막아둔 경우가 있었다”며 “한번 주차를 해놓으면 언제 뺄 지도 몰라 가게를 운영하는 데 불편했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흰색 실선이어도 가게 운영을 위해 적치물을 설치 해놓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도로법 제61조에 따르면 도로 위 적치

물은 행정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골목에서는 사전 허가없이 설치된 불법 적치물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일선 자치구는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과 가게 앞 불법주차가 극성인 만큼 단속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광주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단속 후에도 같은 장소에 다시 적치물을 뒤 똑같은 민원을 받을 때가 있다. 민원이 반복되는 만큼 입주민, 자영업자, 민원인의 갈등이 심화되는 때도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보다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주차장 마련 등 제도 개선밖에 답이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도로 위 불법적치물 단속 건수는 총 2만5500건(동구 1206건, 서구 9771건, 남구 5278건, 북구 6058건, 광산구 3187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과태료 부과 건수는 299건(동구 0건, 서구 204건, 남구 1건, 북구 91건, 광산구 3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 1%에 불과했다. **글·사진=이정준 기자 jeongjune.lee@jnilbo.com**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 울림·새움 사업 본격 시동

공익활동가 등 총 2000여만원 지원

광주 시민사회지원센터(센터)는 지역 공익활동가 또는 청년들의 창의적인 공익 프로젝트를 돕는 시민사회 울림·새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들은 지역의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하고 시민사회의 기반 확대를 위해 준비됐다.

울림 사업은 공익활동가의 현장 경험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대안을 제시하는 ‘현장리포트’와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지역 현안의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N개의 공론장’으로 운영된다.

센터는 울림 사업에 선정된 광주진보연대, (사)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광주공유경제연구원 등 2명의 공익활동가와 10여개 비영리단체에 각 50만~140만원 등 총 1550만원을 지원한다.

새움 사업은 청년들의 창의적 공익프로젝트인 ‘함내라2030’과 소규모 비영리단체의 조직활성화를 지원하는 ‘함께가자 NGO’로 운영된다. 새움 사업에 선정된 지속BAND, 광주청년유니온, 유니버설문화원 등 청년 모듬 및 비영리단체에는 각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지원한다.

센터는 지난 11월 울림과 새움사업에 선정된 공익활동가와 단체 대표자 20여 명이 참여한 협약식을 시작으로, 이달부터 9월까지 각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비와 공간, 장비 등을 지원한다.

특히 ‘현장보고서’와 ‘N개의 공론장’에서 도출된 결과는 11월 열리는 ‘광주아고라-시민사회포럼’에서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울림과 새움 사업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능동적인 역할을 제고하고, 청년과 비영리단체의 조직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센터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며 “센터는 앞으로도 청년-비영리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시민과 이어주고, 시민사회의 기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승진 시험 문제 구매’ 농어촌공사 직원들, 급여 반환 결정

공사 “부정 급여 상승분 뺐어야”
피고 “승진 업무에 정당한 급여”

승진 시험을 보는 데 문제와 답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난 한국농어촌공사 전·현직 직원들이 급여 상승분을 회사에 돌려주게 됐다.

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A씨 등 전·현직 직원 2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2차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어촌 공사 직원들은 지난 2015년에 승진 시험을 앞두고 출제 업체로부터 문제와 답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승진 취소와 해임 처분, 공사 측으로부터 급여 상

승분 반환 소송을 당했다.

앞서 재판부는 2017년 1심과 2심에서 A씨 등이 승진 후 달라진 업무에서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정당한 급여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022년 8월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해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피고들이 승진 후의 근로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었다면, 임금을 더 높게 받을 이유는 오로지 승진이므로 높아진 임금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광주고법으로 보내진 2023년 11월 1차 파기환송심에서는 또 다시 승진 전·후 직무의 실질적인 차이를 인정해 공사

측의 청구를 재기각했다.

이에 공사 측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 재상고를 청구했고, 대법원은 승진 전·후 실제로 행한 업무 간 구체적인 비교가 없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또 다시 돌려보냈다.

2차로 진행된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들의 승진 전후의 직급에 따른 업무에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A씨 등 직원들은 794만원~2469만원 상당을 공사 측에 반환하게 됐다. 이로써 2015년 1월에 시작된 소송이 10년에 걸친 공방과 두 차례의 파기환송 끝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유철 기자

장흥 목재 공장서 불... 인명피해 없어

장흥 한 목재 가공 공장서 화재가 발생해 25분 만에 진화됐다.

14일 장흥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9분께 장흥 용산면 한 목재 가공 공장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1대 인력 28명을 투입해 불을 꺾었다.

다행히 화재 당시 건물 내부에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공장 1동이 전소되면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재산 피해를 규모를 조사 할 방침이다. **이정준 기자**



제120회 서구 아카데미 나태주 시인이 14일 광주 서구청 들불홀에서 열린 ‘제120회 서구 아카데미’에서 ‘꽃을 통해 헤아리는 삶의 지혜’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광주 서구 제공**

광주·전남 노동단체, 급식노동자 산업재해 인정 촉구

광주·전남 노동단체가 정부를 향해 조리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된 급식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인정을 요구했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14일 성명을 내고 “학교와 대기업,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급식노동자들이 유해물질 조리 흡에 장기간 노출되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노동당국은 조리흡에 무방비로 노출된 급식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 말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노동부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서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을 기존

15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조리흡은 제외했다”며 “조리흡이 폐암 등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이 명확해지고 있지만 노동당국은 급식노동자들의 폐암을 개별사례로 치부하며 산재 현황 파악 등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정부에 △조리흡을 ‘직업성 유해인자’로 규정 △조리흡에 의한 폐암 및 호흡기 질환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피해 노동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 대책 마련 △급식실 조리 및 환기 시설 등 작업 환경 개선 대책 제시 등을 촉구했다. **이정준 기자**